

한·중·일 3국 협력의 현황 및 전망

조양현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동북아 3국의 총 경제규모는 NAFTA와 EU에 이어 현재 세계 3위이고, 수년 내 EU를 추월한 전망이다. 3국의 경제규모에 상응하여 한·중·일 3국의 역할과 비중이 글로벌 경제위기의 극복이나 지구온난화문제의 해결 등에 있어서 중요해지고 있다.

국제경제적 비중,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상호의존 등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3국간 협력은 이제 겨우 제도화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3국 협력의 장애요인으로 무엇보다도 지역 내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지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양안 문제나 북핵 문제의 존재 그리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각국의 가치와 인식의 차이 등이 협력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3국 협력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3국 정상회의를 통하여 동북아 협력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정상회의가 3국 간 역사와 영토 문제, 그리고 이념 대결과 주도권 경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으며, 신규 협력사업의 개발 못지않게 기존 협력사업의 내실을 기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

목 차

- 1. 한·중·일 3국 협력의 의의
- 2. 역사 및 현황
- 3. 3국 협력의 평가
- 4. 과제

1. 한·중·일 3국 협력의 의의

○ 동북아는 '지역주의의 불모지'로 불릴 만큼, 정치·안보 현안에 대한 실효적인 다자간 관리체제는 물론, 역내국 간의 무역규모의 비중 및 민간 차원의 교류 확대 등 실질적인 경제통합(지역화)에 상응하는 경제 협력의 규범화(제도화)도 부족한바, 한·중·일 3국 협력 확대를 위한 노력이 절실함.

- 동북아 3국은 2008년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22%, GDP의 17%, 교역량의 16%를 차지하고, 총 경제규모는 NAFTA와 EU에 이어 세계 3위로서 수 년 내에 EU를 추월할 전망이다(표 1 및 표 2 참조). 교역이나 인적 교류 면에서 이들 3국간의 상호의존관계는 심화되고 있는 반면, 정치·안보 분야에서는 여전히 많은 갈등 요인이 상존함.

가. 정치·안보 요인

○ 탈냉전기 동북아에서는 전통적·비전통적인 안보이슈에 대한 지역적·다자간 협력의 필요성이 커짐.

- 냉전의 해체라는 세계적인 추세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에는 여전히 중국·대만문제, 북한문제, 과거사 및 영토 분쟁 등과 같은 냉전적·전통적 위협이 존재하며, 테러, 마약밀매, 대량파괴무기의 확산, 환경·기후변화, 질병(SARS, 조류독감), 자연재해·재난, 불법이주 등과 같은 초국가적·비전통적 위협이 새롭게 등장함.

- 이들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역내 국가들의 공동 대응이 요구되나, 현재로서는 실효성 있는 다자간 관리체제는 확립되어 있지 않음.

나. 경제 요인

○ 전세계적인 시장경제체제의 확산을 배경으로 한 동북아 역내 경제

적 상호의존의 심화, 최근의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 발생은 한·중·일 3국 협력의 제도화를 요구하고 있음.

- 중국의 경제발전, 러시아의 경제력 회복과 아울러 향후 북한의 경제 변화를 계기로 동북아에서 시장경제체제가 확산되고, 에너지·자원, 신흥시장 확보를 위한 경제외교의 비중 증가, FTA 체결 등을 통한 역내 국가 혹은 역외 지역·국가와의 시장 통합의 가속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역내의 이해관계 충돌 완화 및 상생관계의 모색을 위한 지역협력이 중요함.

- 최근 글로벌 금융·경제 위기 이후 한·중·일의 과감한 경기부양,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3국간 통화스와프 체결 등 일련의 선제적 조치가 금융·경제위기의 극복 및 국제 금융·경제 질서의 재편 노력에 기여한바, 향후 한·중·일 3국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다. 지역 정체성

○ 탈냉전 이후 한·중·일 3국간의 양자 및 다자 차원의 민간교류 급증에 따라 이들 3국 간의 지역 정체성 문제가 새롭게 주목받음.

- 최근 급증 추세인 3국간의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기업, 학자간의 다층적 인적·문화 교류는 동북아 3국간의 정치·외교 마찰을 완화하는 중요한 자산이자 동북아 경제통합과 시민공동체 형성의 토대임.

-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회의(APEC), ASEAN+3,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등 동북아를 포함하는 지역개념이 병존하는 가운데, 동북아 지역 단위의 공동체 모색은 그 대립·보완 개념으로서 의미가 있음.

정치안보, 경제, 정체성의 차원에서 한·중·일 협력의 제도화 필요

정상회담은 3국 협력의
시발점이자 최고위급
협력체

2. 역사 및 현황

가. 동남아를 매개로 시작된 동북아 협력

○ 1990년대 후반에 구체화된 동북아 지역협력은 원래 동남아를 매개로 촉발된 것으로, ASEAN+3의 틀과 연계되어 발전되어 왔음.

- 1960년대 출범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은 1990년대 들어 동남아시아 전역 즉, 10개국으로 그 가맹국을 확대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ASEAN 측은 한·중·일 3국 정상을 초청하여 ASEAN+3라는 대화채널을 개설함.

- 1999년 11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ASEAN+3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일 3국 간에 '조찬모임'이 개최되는데, 이것이 한·중·일 3국 협력의 직접적인 계기가 됨.

○ 2008년 12월, ASEAN 지역이 아닌 일본 후쿠오카에서 한·중·일 정상회의가 개최됨으로써, ASEAN+3의 형식을 빌지 않은 독자적인 3국 정상회의가 시작됨.

- 2003년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3국 협력에 관한 최초의 공동성명 채택과 그 후속조치를 위한 '3자 위원회' 설치 등 제도화가 모색된 반면, 2005년에는 한·일, 중·일 간 역사·영토 갈등으로 3국 정상회의가 중단되는 우여곡절을 겪음.

- 한·중·일 협력의 시발점이자 최고위급 협력체로서 3국 정상회의는 각별한 의미를 가지는데, 후쿠오카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동북아 협력에 대한 3국 국민들의 인식이 제고되고 한·중·일 협력이 한 단계 발전하는 전기가 마련됨.

나. 3국 협력의 현황

○ 1999년 11월의 마닐라 회의 이후 한·중·일 3국은 정상회의 외에 외교장관회의와 여타 고위급 협의체 등을 통해 경제·통상, 에너지·환경·항공, 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옴(표 3 참조).

- 현재 한·중·일 3국 내에서 개최되는 협의체와 ASEAN+3을 계기로 한 3국간 협의체가 병존 중임.

(1) 3국내 개최 주요 협의체

(a) 정상회의

○ 2004년 한국 정부가 한·중·일 정상회의의 별도 개최를 제의한 것이 계기가 되어, 2008년 12월 제1차 회의가 일본 후쿠오카에서 열림.

- 제1차 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 동반자관계를 위한 공동선언, 국제 금융 및 경제에 관한 공동성명, 재난관리 협력에 관한 한·중·일 3국 공동발표문 및 한·중·일 3국 협력 증진을 위한 행동계획 등 4개 문서가 채택됨.

- 제2차 회의는 금년 10월 베이징 개최, 제3차 회의는 2010년 한국 개최 예정.

(b) 외교장관회의

○ 2007년 1월 세부에서 한·중·일 3자 위원회에서 한국 측이 외교장관회의의 3국내 개최를 제안하여 성사된 것으로, 제1차 회의가 그해 6월 제주도, 제2차 회의가 2008년 6월 동경에서 개최됨.

- 제3차 회의는 2009년 9월 상하이에서 열려 "전략적 상호신뢰 구축, 협력수준 심화 및 제고, 사회, 문화, 인적 교류 지속, 동아시아 협력 및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에 합의함.

한·중·일 3국은 다양한
고위급 협력체를 통해
협력확대

1) 출고, '후쿠오카 한·중·일 3국 정상회의 평가 및 전망' 「주요국제문제분석, (외교안보연구원: 2009. 1. 22).
2) 외교통상부 동북아국 지역협력과 「한·중·일 협력개황」 (외교통상부: 2008. 11).

지난 10년간의 노력으로
3국 협력은 제도화
초기 단계에 돌입

(c) 기타 3국 정부 간 협의체

○ 1999년 최초의 한·중·일 정상회의 개최 이래, 다양한 분야의 3국 정부 간 협력이 확대된 결과, 2009년 5월 현재, 외교, 재무, 경제·통상, 물류, 환경, 관광, 과학기술 등 15개 장관급 협의체 포함하여 50여 개 정부 간 협의체가 운영 중임.

- 2009년 개최 혹은 개최 예정인 주요 장관급 협의체로는 재무장관회의(09.5, ASEAN+3), 환경장관회의(09.6, 중국), 중앙은행 총재회의(09.7, 중국), 재난관리기관장회의(09.7, 일본), 과학기술장관회의(09.9), 보건장관회의(09.11, 중국), 물류장관회의(09.12, 중국) 등이 있음.

(2) ASEAN+3 계기 주요 협의체

(a) 정상회의

○ ASEAN+3와 연계된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1999년 마닐라 개최 이래 2009년 4월 태국 회의까지 총 9회 개최됨.

(b) 3자위원회

○ 정상회의 합의사항 이행현황 점검 및 실적 보고서 채택 등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외교장관을 수석대표로 하여 통상 ASEAN+3 계기 한·중·일 정상회의 직전에 개최되며, 2009년 5월 현재 총 5차례 개최됨.

3. 3국 협력의 평가

가. 장애 요인

○ 1999년의 한·중·일 정상회의 이래 10년간의 상호협력과 신뢰 증진을 위한 노력의 결과, 3국 협력은 제도화의 초기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정치·외교 분야의 협력은 물론 경제 등 기타 분야의 기능적 협력이 증가하고 그 제도화의 움직임이 가속화함. 3국간 지리적 인접성, 경제적 상호의존의 심화, 에너지, 환경 문제 등 지역적 공동 대응 요구 증대 등을 고려한다면, 3국 협력의 발전 가능성은 매우 큼.

- 그럼에도 불구하고 EU나 ASEAN과 같은 지역공동체와 비교하면, 동북아 지역통합의 정도는 낮은 수준에 있고, 3국 협력의 구체적인 지향점에 대한 의견 교환은 부족한 상황임.

○ 3국 협력의 장애 요인으로는 무엇보다도 지역 내의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지적할 수 있음.

- 탈냉전기의 동북아는 국익, 세력균형, 패권 등 현실주의 국제관계관과 근대국가적 가치체계가 우선하는 지역으로, 중국의 부상과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근대적 주권국가로의 이행과정으로 볼 수 있음.

- 과거사, 영토 문제를 둘러싼 갈등, 애국주의 교육이라는 강한 민족주의 정서가 지배하는 상황에서 지역 안보를 자유주의적 평화, 다자안보공동체 등 논의에 의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다음으로, 정치·안보 현안, 정치·경제 체제 및 인권·사회체제·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3국간 인식 차이임.

- 중국, 대만, 남북한이라는 분단국가의 존재는 양안 문제 및 북핵 문제, 미국과의 관계설정 등에 있어서 한·중·일 3국간 정책 공조를 어렵게 하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체계의 차이 역시 지역협력의 장애요인임.

○ 마지막으로, 지역협력의 방향성 그 자체에 대한 3국간 입장 차이인

강한 민족주의가
3국 협력의 장애요인

3국 협력은 지역통합보다 국가간 협력을 우선적 목표로 해야...

바, 지역협력의 장래상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본격적인 협력에는 한계가 있음.

- 한·중·일 3국 협력의 목표는 이들 국가 간의 협력 증대를 의미하는가, 아니면 궁극적으로 '동북아 단위의 협력체' 구축을 의미하는가? 그 범위에는 러시아, 북한, 몽고 및 미국이 포함되는가? 한·중·일 3국 협력은 동아시아 지역협력과 어떠한 관계에 있으며, 후자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되는가? 등의 문제에 대한 합의가 없음.

나. 발전 방향

○ 이상과 같이 근대적 가치체계가 중시되는 동북아에서는 지역 협력의 우선적 목표를 지역적 다자협력 즉, 국가 주권의 이양을 전제로 하는 초국가적 공동체(지역통합, 지역공동체)보다는 지역 공동의 문제에 대한 국가간 협력에 두는 것이 현실적임.

○ 구체적인 협력분야로서는 경제·통상, 과학기술, 문화 등 기능 분야의 협력 및 교류 확대를 시작으로 정치·안보 분야의 협력 및 공동체 의식의 심화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동북아 안보환경 및 지역협력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우선 기능적 공동 관심사를 중심으로 협력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이 본격적인 궤도에 접어든 후에 유럽과 같은 안보공동체를 향한 협력을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임.

- 실제로 지난 10년간의 3국 협력은 경제, 문화·인적교류, ASEAN 관련 협의에서 시작하여, 해양구난 등 비전통안보, 북핵 문제, 환경·기후변화 등 지역 및 글로벌 이슈로 논의 범위가 확대되어 왔음.

○ 2008년 한·중·일 정상회의 공동성명에서 제시된 포괄성, 포용

성, 상호 보완성이라는 3국 협력의 원칙은 중요한 시사를 제공함.

- 포괄성이란 분야 및 주체에 있어서 “미래 지향적인 자세로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분야에서 정부 및 민간을 막론한 포괄적인 협력”을 의미함.

- 포용성이란 운영방법, 이념·가치와 관련하여 “3국간 협력이 개방성, 투명성, 상호신뢰, 공동이익 및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존중 등의 원칙에 근거”함을 뜻함.

- 상호 보완성이란, 타 기구와의 관계 설정에 관한 것으로 3국 협력이 “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보다 광범위한 지역 협력체제의 발전에도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기여”함을 의미함.

4. 과제

가. 3국 협력 모멘텀 유지에 대한 정치적 의지

○ 동북아 협력의 정착을 위해서는 3국 정상회의의 역내 순환 개최 원칙이 지켜져야 하는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양자 현안을 둘러싼 첨예한 대립이 3국 협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정치적 의지가 중요함.

- 전술한 대로, 한·중·일 3국 간에는 역사, 영토, 이념대결, 민족주의, 지역패권경쟁, 정치체제의 차이 등 수많은 대립·갈등 요인이 존재하며, 이는 언제든지 3국 협력을 와해시킬 수 있는 폭발력이 있음. 최근까지도 3국 정상회의의 개최 여부는 영토, 역사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음.

- 동아시아의 공동 번영을 위해서는 3국 협력이 불가결하다는 인식과 함께, 3국 협력의 최상위 협의체인 3국 정상회의를 역사, 영토

3국 정상회의 개최문제는 영토, 역사문제로부터 분리되어야...

여타 협력체와

상생적 관계설정이 중요

문제와 분리하여 추진해 나가려는 3국 지도자들의 강한 의지와 신뢰관계가 중요함.

나. 협력 방안의 실효성 확보

○ 다양한 신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동시에 기존 사업을 실효성 있게 운영해 나가는 노력이 중요함.

- 작년 12월의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행동계획에 포함된 세부 협력 사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이를 한층 구체화하고 구속력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의 후속 조치가 요구됨.
- 특히 양자 및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 투자협정 문제 등 중요한 경제현안에 대해서는 3국간의 구체적인 합의가 결여됨.

다. 여타 협력체와의 관계설정

○ 작년 3국 정상회의에서 동북아 지역협력과 타 지역기구와의 관계에 대해 상호보완성이란 원칙이 제시되었지만, 동아시아 지역협력을 둘러싸고 일·중 간의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3국 협력과 여타 지역기구와의 관계설정은 난해한 문제임.

- 일·중 양국은 동북아 지역협력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동아시아 단위의 지역협력에 있어서도 각각 동아시아정상회의(EAS)와 ASEAN+3에 적극적임. 동북아 협력과 이들 지역기구와의 관계 설정에 따라 3국 협력의 추진력은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동남아, 동아시아, 아시아·태평양, 기타 역외 협력체와의 중층적 협력관계 구축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ASEAN과의 상생적 관계설정이 중요함.

[표 1] 한·중·일 합산 통계

구분	한·중·일 합산		세계 전체	비중 (세계 대비)
GDP	'07	8조 5,596억불	54조 5,838억불	15.7%
	'08	10조 2,724억불	60조 6,898억불	16.9%
외환보유액	'08	3조 1,778억불	6조 7,129억불	47.3%
교역량	'07	4조 4,090억불	28조 1,868억불	15.6%
	'08	5조 2,212억불	32조 7,136억불	16.0%
인구	'08	15억 0,107만명	67억 0,699만명	22.4%
국방비	'08	1,554억불	1조 4,640억불	10.6%

[표 2] 한·중·일 주요 통계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면적	22,2만km ² (남한:9,9km ²)	960만km ² (남한의 97배)	38만km ² (남한의 3.8배)	
인구	4,860만명(세계 25위)	3억 2,470만명(세계 1위)	1억 2,777만명(세계 10위)	
GDP	'07	9,698억불(14위)	3조 2,055억불(4위)	4조 3,843억불(2위)
	'08	9,287억불(명목, 잠정)	4조 4,022억불	5조 3,393억불(잠정)
1인당 GDP	'07	2만 1,655불	2,560불	3만 4,318불
	'08	2만 15불	3,315불	3만 8,559불
경제성장률	2.2%	9.0%	△0.7%	
외환보유액	2,012억불(6위)	1조 9,460억불(1위)	1조 306억불(2위)	
총교역액	8,573억불 수출 4,220억불/수입 4,353억불	2조 5,603억불 수출 1조4,289억불/수입 1조1,315억불	1조 5,320억불 수출 7,759억불/수입 7,561억불	
	한국에 있어 일본은, · 수입 2위국(610억불) · 수출 3위국(283억불) · 교역 2위국(893억불) · 적자 1위국(327억불)	중국에 있어 한국은, · 수입 2위국(1,122억불) · 수출 4위국(739억불) · 교역 4위국(1,861억불) · 적자 2위국(382억불)	일본에 있어 한국은, · 수입 7위국(292억불) · 수출 3위국(590억불) · 교역 3위국(882억불) · 흑자 3위국(297억불)	
3국간 교역 (교역액)	한국에 있어 중국은, · 수입 1위국(769억불) · 수출 1위국(914억불) · 교역 1위국(1,683억불) · 흑자 1위국(145억불)	중국에 있어 일본은, · 수입 1위국(1,506억불) · 수출 3위국(1,162억불) · 교역 2위국(2,668억불) · 적자 3위국(345억불)	일본에 있어 중국은, · 수입 1위국(1,423억불) · 수출 2위국(1,240억불) · 교역 1위국(2,663억불) · 적자 6위국(183억불)	
	對日투자 14위국(6.09억불) 對中투자 2위국(48.5억불)	對韓투자 9위국(3.36억불) 對日투자 14위국(0.37억불)	對韓투자 2위국(14.2억불) 對中투자 5위국(65.0억불)	

[표 3] 한·중·일 협의체 일람표

	전반/ 외교·정치	무역/투자	금융/ 거시경제	농업/어업/ 임업	에너지	환경	관광	문화	교육	과학기술	ICT	운송	방재	인사 행정	소비자	보건	법무/ 치안	수준별 협력체수	
정상	한·중·일 정상회의, ASEAN+3 계기																	2	
장관급	외교장관회의	경제통상 장관회의												지진협력 청장회의				17(*1)	
	3자위원회	관세청장 회의 특허청장 회의	재무장관 회의		에너지 장관 회의	환경 장관 회의	관광 장관 회의	문화 장관 회의		과학기술 장관회의	정보통신 장관회의	물류 장관회의		재난관리 기장관 회의*	인사 장관 회의		보건 장관 회의		
고위급 실무자	외교부간고위급 (차관보) 회의																	1	
국장	중남미 정책국장급 회의	다자통상 국장회의	한·중·일 국제국장 회의	수산당국간 고위급 회의		기후변화 국장급 정책협의			교육 국장급 회의	과학기술 협력국장급 회의	정보통신 국장급 회의			재난관리 국장급 회의	인사 국장 회의			치안 관계 고위급 회의*	17(*2)
		한·중·일 투자협정 협상				ICT OSS회의					ICT 전문가회의								
		비즈니스 환경개선 협의체 회의				한·중·일 3개국 황사대응 국장급 회의					문화콘텐츠 산업포럼								
실무자	부국장급 (과장급)회의	동부아시아 표준협력 회의				대기오염물질 장거리 이동 연구 프로젝트			과학기술 정책세미나		물류 과장급 회의			인사 행정 심포 지엄	소비자 정책 협의회	과장급 회의	인터플 3자 회의*	13(*2)	
		한·중·일 지적 재산 워킹 그룹				한·중·일 화학물질 정책대화					과장급 회의*								동북아 항만 과장급 회의
		FTA 민간 공동연구				환경산업 원탁회의													
분야별 협력체수	7	9	3	1	1	6	1(*1)	1	1	3	5	5	2(*1)	3	1	2	0(*2)	51(*4)	

편자: 한인택(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